

연 대 성 명 서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10길15 트윈타워오피스텔 B동 1201호
전화 02-575-9264 팩스 02-576-9264 이메일 consumer@can.or.kr

담당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 명	02-739-5441
	(사)소비자권익포럼 사무총장	김혜란	02-575-9264
	미래소비자행동 본부장	김은정	02-706-1372

2021년 11월 23일 (화)

증가하는 국민의 간호요구 반영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간호법 제정 필요해!
- 현행 의료법으로는 증가하는 간호요구 담기 어려워, 질병의 만성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 감염성질환의 증가 간호수요의 폭증 등 시대상황을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형 간호법으로 발전해야!
- 간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간호전문성 향상, 면허와 자격에 근거한 간호업무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 확보해야 !

■ 변화하는 간호에 대한 국민요구 반영한 간호법 제정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리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이 심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는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간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질병의 만성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가정간호시설 등 간호요구가 다양한 분야로 증가하면서 간호의 전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팬데믹 상황은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에서 위생과 간호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간호법의 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치료행위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증가하는 간호와 전문화 요구 담기 어려워 !

우리나라 간호에 관한 법규는 1914년 단독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들을 강제징용하기 위해 당시 모든 의료관련법안(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간호사규칙)을 통합하면서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정부수립 후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져 오늘의 의료법 뿌리가 됐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이 후 1948년 의료법과 함께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의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별도로 복원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전체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1951년 시절에 만들어져 의사법으로 간주될 정도다. 당시 간호사 숫자는 고작 1,700명으로 의사(5,082명)의 절반도 안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46만명)가 의사(13만명)의 3.5배이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평가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라고 정의하고 있고 의료인의 책임 및 의무, 면허 및 자격시험, 의료기관의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치료 과정에서의 면허자를 규율한 법으로 의료법 93개 조

항 중 의료인을 공통적으로 다룬 조항을 제외하면 간호사의 면허, 업무규정을 다룬 조항은 단 2개 조항(제7조 간호사 면허, 제78조 전문간호사)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중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관련법규에는 의료법 외에도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결핵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중 의료법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법 체계가 증가하는 간호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다 보니 각 개별법에서 제각각 다른 기준과 규정으로 업무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간호의 수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난 2015년 12월 29일 이와 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호관련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좀더 구체화 하였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 간호업무, 진료보조업무,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법의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간호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의 간호서비스 시스템을 담아내는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간호는 의료뿐 아니라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판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의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

■ 면허와 자격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수급, 간호요구 반영한 국가역할 강화해야 !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

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의료뿐 아니라 위생, 영양,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적 간호 발전을 다루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면허와 자격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과 장단기 인력수급,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간호관련 직능의 개발과 교육, 간호의 전문성 강화 등 간호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을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간호법은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변화하는 우리사회 건강증진과 간호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역이 함께 힘써야 할 과제이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건강과 간호의 질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촉구한다.

※ 보도 관련문의 :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

☎ 02-706-1372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시민모임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 미래소비자행동